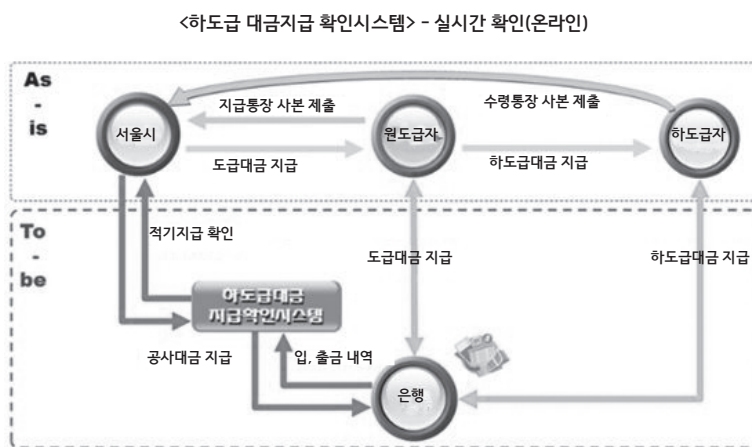


서울시, 하도급 대금지급 온라인서 실시간 확인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 부적정 지급(미지급·지연지급·어음지급) 및 근로자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안에 온라인으로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편집자주]



있으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복잡한 확인절차에 따른 시차가 발생하고 사후 조치의 실효성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온라인 확인시스템이 구축되면 대금지급 확인이 훨씬 수월할 뿐 아니라 증빙서류 준비로 인한 업무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우선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

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뒤 시 전체 및 자치구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른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은 하도급대금 지급·관리·보고 및 직권 직불처리 등 제반업무가 자동화되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 직불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지수에 협력사간 결제수단 및 결제기간 통일성을 평가할 예정이어서 민간사업장에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금융기관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구축, 11월부터 시범실시한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4월부터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하도급을 둘러싼 부조리 근절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4월 5일 종합건설사들의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하도급계약이 포함된 모든 공공공사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규정을 명문화한다고 밝혔다.[편집자 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계약과정에서부터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공정하고 수평적인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모든 도급공사에 대해
4월부터 발주하는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규정”을 명문화 한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여 원도급업체의 대금지급 지연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원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장기어음을 끊어주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저가 수주로 인한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가 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계약과정에서부터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공정하고 수평적인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모든 도급공사에 대해 4월부터 발주하는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규정”을 명문화 한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의 입찰공고문에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협의서 제출을 명문화 하는 한편, 제출이 어려울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협의서 허위 작성을 방지하고자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도 추가로 제출토록 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유영성 본부장은 “최근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나왔다”면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시행을 통해 2010년 47%에 불과했던 직불제 이행 실적을 2011년에는 78%, 2012년에는 9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발주될 인천가족공원 조성 2단계, 인천 국제빙상경기장 건립 등 8건(918억원)의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지난 해에는 총 26건(1,502억원)의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이 권고된 바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해 12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 관련 계약분야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서울특별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의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은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효과적으로 뿌리내리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